|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 | |
|---|---|---|
|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 | |

| 제공일자 | 2026. 3. 11. (수) | |
|---|---|---|
| 문화복지 전문위원 | 강명주 | 803-5022 |
| 문화복지 정책지원팀장 | 임종갑 | 803-5066 |
| 담 당 자 | 이동원 | 803-5199 |

# 이동욱 의원,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위한 대구형 청년 일자리 정책 전환 촉구

**- 대구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이탈... 투자 우선순위 바꿔야**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3월 11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을 복지 중심에서 기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구의 전입자는 약 26만 8천 명, 전출자는 약 27만 2천 명으로 약 4천 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에서 약 4,600명의 순유출이 발생해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세대가 도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층 전출 사유의 약 22%가 직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구의 청년정책은 주거 지원이나 활동 지원 등 복지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며, “국비 지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정책을 멈출 것이 아니라 대구시 자체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유치 정책과 청년 고용의 직접적인 연계, ▲지역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준 검토, ▲대구형 청년 일자리 정책과 예산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업, 산업, 주거 정책이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현재 구조로는 청년 유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청년 관련 부서가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이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전략적 투자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